

# 文, 스타트업 선도국 핀란드서 5G·AI 협력기반 마련

대통령, 6박8일 북유럽 3국 방문

핀란드·노르웨이·스웨덴 일정소화  
오타니에미 산학연단지 등 방문키로

문재인 대통령이 9일부터 오는 16일  
까지 6박8일간 일정으로 '핀란드·노르  
웨이·스웨덴'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  
한다.

청와대에 따르면, 문 대통령은 9일부  
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해 사울리  
니니스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 
다. 또 린네 신임 총리와 의 회담, 한-핀  
란드 스타트업 서밋, 오타니에미 산학  
연 단지(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  
브)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.

청와대 관계자는 "이번 핀란드 국빈  
방문은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  
와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



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. 문 대통령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·노르웨이·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 한다. /연합뉴스

의견을 교환하고, 5G·6G 차세대 이동  
통신 및 인공지능(AI) 등 4차 산업혁명  
분야에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 
될 것"이라고 했다.

문 대통령은 핀란드 방문 후 11일부

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국빈방문한  
다.

문 대통령은 노르웨이에서 에르나 솔  
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. 우  
리기업이 건조한 군수지원함에 승선할

예정이기도 하다.

청와대 관계자는 "이번 노르웨이 국  
빈방문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 
노르웨이 국왕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 
것"이라며 "우리 대통령으로서 최초  
의 국빈방문"이라고 했다. 이어 "이번  
방문을 통해 미래의 청정에너지인 수소  
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,  
조선해양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  
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부  
연했다.

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 후 13일  
부터 15일까지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 
다. 문 대통령은 스웨덴에서 뢰벤 총리  
와 정상회담을 갖는다. 또 5G 기술 관  
람 및 사회적기업 허브인 노르웬 재단  
등을 방문할 예정이다.

청와대 관계자는 "핀란드·노르웨이·  
스웨덴 3국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 
추진 중인 혁신성장, 그리고 한반도 평

화 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  
요한 협력 대상국들"이라며 "이번 순방  
은 우리 정부의 역점 과제인 '혁신성장'  
및 '포용국가 실현'을 위한 협력기반을  
확충하기 위함"이라고 했다.

이 관계자는 또 "한반도의 완전한 비  
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"을 이루는  
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  
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"고  
했다.

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9  
일 브리핑을 통해 "문재인정부의 신남  
방-신북방정책은 미국과 중국에 치우  
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, 외교 지평  
과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기여해왔다"  
며 "이번 북유럽 순방은 신남방-신북방  
정책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이 절실  
한 우리경제 다변화에 기여할 것"이라  
고 했다.

/우승준 기자 dn1114@metroseoul.co.kr

## 靑 "대외여건 불확실성 예상보다 커졌다"

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

"경제상황 어려운 엄중한 현실 인식  
예산증가율 9.5%, 공공투자 확대"

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9  
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"대외여  
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"  
고 말했다.

윤 경제수석은 "세계경기가 하향세  
를 나타내고 있고, 특히 최근 통상마찰  
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 
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"  
고 이렇게 말했다.

윤 경제수석은 "또 한편으로 최근 나  
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 경쟁, 이  
런 부분과 결부돼서 조금 더 장기화  
될 소지도 있다"고도 했다.

윤 경제수석은 현 경제상황을 진단한  
후 "우선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여러  
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 
현실 인식 하에 대응을 했다"며 "글로벌



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. /연합뉴스

금융위기 이후 저하가 금년도 예산 증  
가율이 9.5%, 또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  
했고, 추가경정예산안도 저하가 제출한  
바가 있고, 올해 성장 전망이 몇 %가 될  
것인지 민간기관들도 내놓고 있다"고  
운을 땀다.

윤 경제수석은 "정부는 다가올 하반  
기 대책을 6월 말에 발표, 그 기회에 전

망을 짚어볼 계획"이라며 "아무래도 투  
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 
중점을 뒀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  
하고 있다"고 했다.

윤 경제수석은 재차 "지금 불확실성  
이 여전히 크지만, 산업혁신 방향과 전  
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 
좀 더 앞당겨서 (6월 중에) 추진할 계  
획"이라고 했다. 당초 제조업 르네상스  
전략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었다.

윤 경제수석은 계속해서 "또 미래차  
계획을 8월에, 섬유패션 및 차세대 디스  
플레이 산업 등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저  
하가 제시할 계획"이라고 했다.

한편 윤 경제수석은 공정경제와 관련  
해선 "그동안 여러 대책을 추진했고, 앞  
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, 공공  
기관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 
관행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"이라며  
"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 
런 공정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생  
각"이라고 했다. /우승준 기자

## 기자를 적으로 돌리는 국방부대변인



문영철

국방기자 칼럼

절 공적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기자  
는 "왜 국방부와 육군이 침묵하느냐"  
면서 최 대변인이 지난 정부에서  
국방부대변인직위를 신청한 것을  
지적했다.

한민구 국방부장관 시절 최 대변  
인이 대변인 직위신청을 했다는 것  
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.한 정  
부 관계자는 "최 대변인의 그런 전적  
이 우려돼, 대변인 임명에 신중을 기  
해야 한다"고 말한바 있다.

기자는 거침없는 말과 막힘없는  
글쓰기 땔수 없는 강한 눈을 가져야  
하는 직업이다. 그렇지 못하다면 기  
자는 속기사처럼 빨리 받아쓰는 일  
만 해야한다. 그런 기사에 저널리즘  
이 꺾이나 있겠다.

공문전달과 관련해 국방부대변인  
실 관계자는 "정중한 사과를 요구할  
뿐 다른 의도는 없다"고 말했다. 정  
중한 사과는 양쪽 모두가 서로를 인  
정할 때에 가능하다. 공직의 직위를  
이용해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  
는 것은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현 정  
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.

지난해 8월 한 시민은 국민심문고  
를 통해 국방부에 '2차연평해전 전  
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기사를 왜  
내렸느냐'는 질의를 올렸다.

이 대령과 임 대령은 "기자가 악의  
적으로 수정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 
서 삭제됐다"고 답변했다. 분명 사전  
에 수정을 해주겠다고 했건만 자신  
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들은 거짓  
말을 한 것이다.

국방부대변인을 비롯한 일부 당  
국자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. 기간  
이 정해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중  
한 사람의 가치를 버리니 말이다. 최  
대변인에게 자신은 사죄하지 않으  
면서 타인에게 사죄를 왜 강요하  
는지 몰았다. 하지만 그는 침묵했  
다. 내가 해줄 사죄서는 '내로남불  
(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)  
이다. /captain@

## "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확대해석 말아야"

김연철 통일부 장관

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계 일각에서  
제기된 '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  
성'과 관련해 "지금 상황에서는 낙관도  
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"이라고 확대  
해석을 경계했다.

김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 
해 "(여권 안팎에서도 '6월 남북정상회  
담 성사 가능성'이 제기되는 것은) 매우  
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"이라고  
이렇게 말했다.

김 장관은 "지금 대통령께서 정상회  
담을 제안한 직접적 목적은 북미정상  
회담 재개를 위한 것"이라며 "그 목적  
에 한정한다면 (향후 진행될 남북정상  
회담은)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 
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"고



김연철 통일부 장관. /연합뉴스

도 했다.

김 장관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남  
북정상회담 배경은 이렇다. 문 대통령은  
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  
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

회담을 가졌다.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 
'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'를 언급  
했다.

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 
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 
이유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 
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관 깊  
다. 당시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  
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. 즉 조속한  
남북정상회담은 '북미간 비핵화 담판'  
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  
인 셈이다.

한편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  
면,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열리는 남  
북정상회담이 된다. 문재인 정부 출범  
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(작년  
4·27-5·26-9·19) 진행됐다.

/우승준 기자